

# 2008년 경제운용방향

2008. 1. 9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

# 목 차

I . 2007년 경제운용 성과 .....	1
1. 2007년 경제운용 성과 .....	1
2. 경제운용상 미흡했던 점 .....	4
※ 참여정부 경제운용 성과	
II . 2008년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 .....	8
1. 대외 경제여건 .....	8
2. 국내 경제여건 .....	14
3. 2008년 경제전망 .....	15
III . 2008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17
IV . 주요 정책과제 .....	19
1. 안정적인 성장기조 정착 .....	19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24
3.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	27
4.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32
5. 적극적인 대외 개방 및 협력 강화 .....	36
V . 참여정부 마무리 과제 .....	39
1. 주요 입법과제 .....	39
2. 정책과제 .....	41

# I. 2007년 경제운용 성과

## 1. 2007년 경제운용 성과

- ◇ 2007년에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
  -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거시정책 운용
  -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동반성장 노력 지속
  - 한·미 FTA 등 대외개방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강화

### 1]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내외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 (재정운용) 예상되는 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진폭을 완화

\* 상반기 재정집행률(주요사업비, %) : ('06) 53.0 → ('07) 56.0

- (高유가)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07.11)

- (부동산) 「11.15 방안」, 「1.11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07년중 부동산 가격 안정세 유지

\*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 추이(전기비, %)  
: ('06) 7.9 → ('07.1/4) 1.7 → (2/4) 0.7 → (3/4) 0.8

- (금융·외환) 국내 유동성, 단기외채 증가 등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마련('07.1),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TI 기준 강화('07.8) 등

②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 (기업환경 개선) 선진국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 마련('07.6)

- 금융·입지·인력·환경·세제 등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 (서비스 산업) 두 차례에 걸쳐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07.7, '07.12)

-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촉진하고 첨단 ICT 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 유도

- 차세대 유망 성장산업이나 아직 취약한 문화·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③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노후생활) 기초노령연금('08.1 시행) 및 장기노인요양보험('08.7 시행)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준비

\* 지원대상 :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노인('08년 60%, 약 300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중풍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

○ (고용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및 재정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명 지원

○ (서민금융) 대부업 제도개선, 대안금융 확대,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인하(66 → 49%, '07.10)

\* 휴면예금법 제정('07.8월) 및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추진중

\* 저소득층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경감('07.하반기부터)

4]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능동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성숙한 시장경제로의 전환 추진

- (자본시장)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금융법을 통합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07.7)
- (노사관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07.7)
- (공공부문 혁신) 공공기관의 운용시스템을 혁신하고 국가 회계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추진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07.1) 및 시행령('07.3) 제정
  - \* 국가회계법을 개정('07.9)하여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
- (대외 개방) 한·미 FTA 협상을 타결('07.4)하고 피해지원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보완대책과 법·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07.6)

5]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07.7) 하고 기금운용관리체계의 개편방안 마련('07.12 국회 제출)
- (인적자원) 저출산·고령화추세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추진
  - \*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 수립('07.2)
- (남북경협) 남북정상회담('07.10)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공동번영의 기틀 마련

## 2. 경제운용상 미흡했던 점

① (일자리 창출) 상용직 확대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양적으로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30만명)에 다소 미흡

\* 일자리 창출(만명, 월평균) : ('07.1/4) 26.4 → (2/4) 28.9 → (3/4) 29.6 → (10~11월) 28.4

\* 상용직 증가(만명, 월평균) : ('07.1/4) 35.0 → (2/4) 37.6 → (3/4) 51.3 → (10~11월) 43.1

② (서민경제) 실질총소득(GNI) 증가폭이 확대되고 명목 임금도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유류비 등 서민생활 부담이 늘어나는 모습

○ 특히, 광열·교통비 지출비중이 높거나 생업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

\* 실질 GNI 증가율(%) : ('06) 2.3 → ('07.1/4) 3.4 → (2/4) 4.7 → (3/4) 5.4

\* 최근 2년간 월소득 120만원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계의 유류비는 월 평균 12천원, 월소득 250만원 수준의 가계는 월 평균 16천원 증가

③ (규제개혁) 그동안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은 측면

○ 규제완화가 일선현장에서 합목적보다는 합법에 보다 치중하여 소극적으로 적용되는 등 규제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당초 취지만큼 충분히 체감되지 못함

④ (부동산) 안정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확고한 시장안정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

\* '07.1~11월중 전국 월평균 거래량은 67,666호로 '06년의 73% 수준

## 참고

## 참여정부 경제운용 성과

①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지양하고 구조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

② 출범당시 카드버블에 따른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잠재성장을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혁신주도형 경제시스템을 정착

① 거시정책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

\* 경제성장률(%) : ('03) 3.1 → ('04) 4.7 → ('05) 4.2 → ('06) 5.0 → ('07전망) 4.8

\* 참여정부 5년('03년~'07년)간 평균성장률 4.4%(잠정)는 선진국(IMF기준, 29개국)의 2.6%, OECD 2.7%, 유로지역 1.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특히, 대외·금융·원자재·부동산·노동부문 등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발전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위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착

② 서비스산업·금융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경영·투자환경을 개선하였으며, R&D와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07.7)

\* R&D예산(조원) : ('03)6.5 → ('04)7.1 → ('05)7.8 → ('06)8.9 → ('07)9.8

- 최근 환율이 절상되는 가운데서도 두자리수의 수출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반증

\* 수출증가율(%) : ('03)19.3 → ('04)31.0 → ('05)12.0 → ('06)14.4 → ('07)14.2

※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우리의 경쟁력 순위가 06년 세계 23위에서 07년 11위로 상승하고 선진국 모델인 3단계의 혁신주도경제로 완전히 진입한 것으로 평가

\* 2006년 2 - 3단계 중간 ⇨ 2007년 3단계  
(1단계 : 요소주도경제, 2단계 : 효율성주도경제, 3단계 : 혁신주도경제)

③ 노동·복지 분야의 개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제고

- \* 복지지출비중(통합재정대비, %) : ('02) 19.9 → ('06) 27.9
- \* 비정규직 보호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완료('06.12)

-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었던 소득분배 지표가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꾸준히 개선

- \* 지니계수(도시근로자) : ('97) 0.283 → ('98) 0.316 → ('06) 0.310
- 지니계수 개선율(도시근로자, %) : ('98) 1.2 → ('06) 4.2

- OECD 등에서 평가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감소

- \* 노조조직률(%) : ('02)11.6 → ('04)10.6 → ('06)10.3
- \* OECD 노동유연성 평가 : ('99) 17위/27개국 → ('04) 12위/28개국
- \*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천일) : ('02) 1,580 → ('06) 1,201

④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기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공공부문 혁신을 통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

- \* IMD 정부행정효율(government efficiency) 순위 : ('03) 37 → ('07) 31
- WEF 공공제도(institutions) 순위 : ('03) 36 → ('07) 26

- \*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5위(05년), 美 브라운대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06년)
- \* 출입국 심사시스템·정부혁신지수·전자조달 시스템이 UN 공공행정상을 연속 수상

-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국가재정법을 제정('06.10)하여 책임·성과·자율중심의 선진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 \* 4대 재정개혁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⑤ 한미 FTA 체결('07.4) 등 주요 교역국과 FTA를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하는 등 능동적인 개방과 국제화 추진

- \* FTA 기체결(타결)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상품, 서비스), 미국
- \* 협상중 :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 남북 경제협력도 남북 경제공동위가 설치('07.11) 되고 경제협력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발전의 기틀을 마련

⑥ 기업·금융부문에서는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였으며, 기업의 수익성·재무 건전성이 제고

\* 제조업 부채비율 : ('02) 135.4 % → ('06) 98.9 %

\*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 ('02) 4.69% → ('06) 5.69%

\* 국내은행 BIS비율 : ('02) 11.33% → ('06) 12.75%

※ 참고 : 참여정부 주요 정책의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금융연구원 07.12)

◇ 중장기적으로 참여정부 주요 정책들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1.5%p 내외수준 제고될 것으로 분석

① 한·미, 한·EU FTA : 0.76%p(KIEP, '07.7)

② 금융허브 구축 등 금융산업 선진화 : 0.29%p

\* 설비투자 촉진 0.04%p, 생산성 제고 0.25%p

③ R&D 투자 확대 : 0.6%p

\* TFP 증가 0.42%p, 설비투자 증가효과 0.18%p

④ 남북 경협 확대\* : 0.03%p(한은 '06)

\* 향후 경협이 개성공단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한 것이며 남북 평화공존체제 강화 등을 감안시 추가 효과 기대 가능

⑤ 지역균형발전 정책 : 0.2%p

※ 연구결과 해석시 유의점

○ 각 개별 정책의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 잠재성장률 제고효과는 개별정책 효과의 단순합보다 작을 수 있음

○ 개별정책의 효과 산정시 CGE 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연구결과의 일관성에는 한계

○ 상기효과는 중장기적(10년 정도)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상승한다기 보다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둔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을 둔화시키는 효과 기대

## Ⅱ. 2008년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

### 1. 대외 경제여건

① (세계 경제)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고유가 등에 따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다만, 중국 등 신흥국가들이 고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 선진국 수요 둔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 성장 전망(%)

	과거 10년간 평균성장률 <sup>1)</sup>	2007년 전망		2008년 전망	
		IMF	OECD <sup>2)</sup>	IMF	OECD <sup>2)</sup>
· 세계경제 성장률 <sup>3)</sup>	4.0	5.2	2.7	4.8	2.3
(미 국)	3.1	1.9	2.2	1.9	2.0
(유 로)	2.2	2.5	2.6	2.1	2.0
(일 본)	1.3	2.0	1.9	1.7	1.6
(중 국)	9.4	11.5	11.4	10.0	10.7

<주> 1) IMF추정('07.10), 2) OECD 회원국(30개) 기준, 3)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② (미국경기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서브프라임 부실 등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2% 내외의 성장 전망

-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의 유가 상승도 경제의 둔화요인으로 작용
  - 투자까지 위축시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대두
    - \* 약달러 추세에 따른 미국수출 호조세가 미국 소비위축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미국 투자의 영향을 가늠
-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당분간 지속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예상
  - \* 서브프라임 부실문제가 확산되면서 '08년 상반기까지 시장 불안이 고조되었으나, 변동금리 전환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이후에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
  - \* 최근 美 정부 대응조치 :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 동결 등 '주택유질 처분 축소방안' 발표('07.12.6), 연방기금 기준금리 인하('07.12.12 FOMC) 등

③ (중국 성장세 지속)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추가 긴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10%대의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

- 고성장에 따른 과잉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자산버블 논란 등 경기과열 우려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긴축조치 실시 예상

\* 中 CPI 추이(%) : ('07.1/4)2.7→(2/4)3.6→(3/4)6.1, (9)6.2→(10)6.5→(11)6.9

- 그러나, 긴축조치의 방법과 강도는 중국의 성장세에 큰 영향을 줄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

④ (유가·기타 원자재)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다소 완화될 전망

- 유가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나 개도국 수요증가·OPEC 고유가정책 등에 따라 연평균 \$70대 중반(Dubai)의 고유가는 지속될 전망

기관별 2008년 유가 전망(연평균, \$/b)

	유 종	2006년	2007년 전망	2008년 전망	
美	캠브리지에너지硏(CERA)	Dubai	61.5	68.6	73.6
英	세계에너지硏(CGES)	Brent	65.0	72.9	82.4
美	석유산업硏(PIRA)	WTI	66.0	72.2	80.4

- 비철금속 가격은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곡물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08년 대외여건은 하방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07년 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다만,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 된 중국 등 신흥개발국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급격한 경기둔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예상

## <참고 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미국경제 침체 가능성

① (주택 및 금융부문 불안) 아직 미국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택부문 부진이 확산되고 서브프라임 부실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 (실물경제)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4/4분기 이후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소비지출 및 고정투자 증가세 지속 및 달러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07.3/4분기 GDP(연율)는 4.9% 성장 시현

미국 경제 주요지표 추이(전기비 연율, %, 잠정치)

	'06.3/4	4/4	'07.1/4	2/4	3/4
실질GDP	1.1	2.1	0.6	3.8	4.9
개인소비지출	2.8	3.9	3.7	1.4	2.7
기업고정투자	5.1	△1.4	2.1	11.0	9.4
수출	5.7	14.3	1.1	7.5	18.9

- 그러나, 주택부문 부진에 따른 파급영향이 실물경제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

\* 미국 4/4분기 성장률 전망(%)

: (Merrill Lynch)0.4 (Goldman Sachs)1.5 (JP morgan)0.5 (Lehman Brothers)1.4

○ (금융시장) '07.9월 이후 세차례에 걸친 금리인하(5.25%→4.25%)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우려 확산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

- 신용평가사들이 서브프라임 관련 유동화 증권에 신용등급을 하향하고, 손실의 주체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신용불안 확산

서브프라임 부실 관련 예상

◇ Bernanke FRB 의장은 당초 부실규모를 500~1,000억불 수준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1,500억불 수준으로 상향 조정

◇ OECD는 최근 내년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브프라임 관련손실을 2,000~3,000억불로 추정

◇ Deutsche Bank는 부실규모를 최고 4,000억불 수준까지 추정, 이는 90년대 美 저축대부조합 위기시의 2,200억불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과 맞물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② (성장을 하락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전망) 08년 미국 경제는 2%내외로 성장세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전망

○ 대부분 전망기관은 내년 미국경제 성장세가 2% 내외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IMF는 '07.10월 08년 미국 성장전망을 당초 2.8%에서 1.9%로 하향조정하고, FRB도 '07.11월 당초 2.25~2.75%에서 1.8~2.5%로 하향 조정

-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의 유가 상승도 경제의 둔화요인으로 작용

- 투자까지 위축시 경기침체(recession)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으나,

· 달러화 약세에 따른 수출 호조, 기업부문의 현금 흐름 및 수익성이 아직 견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부문의 부실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약달러 추세에 따른 미국수출 호조세가 미국 소비위축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미국 투자의 영향을 가늠

○ 서브프라임 문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04~'06년중 발행된 금리전환부 모기지(ARM)의 금리재조정이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부실문제의 재연 우려

\* 금리재조정 규모 추정(10억불) : ('07)308 → ('08) 349 → ('09) 52

\* 미국 Paulson 재무장관도 최근 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

-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규모 추정이 어렵고 추가 손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장참여자들은 신용위험이 부각될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이전 등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

\* 외국 대형금융기관은 07.3/4분기 약480억불의 손실을 발표하였으며, 4/4분기에도 500~600억불 추가손실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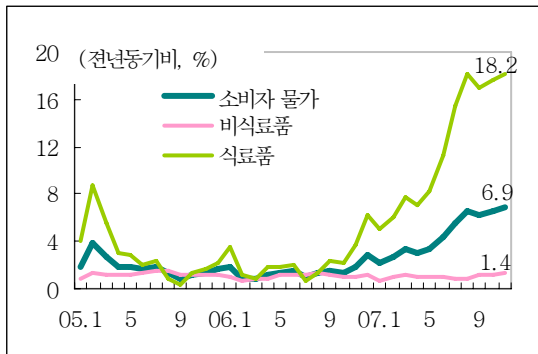
## <참고 2> 중국 인플레이션 및 추가긴축 우려에 대한 평가

### ① (중국물가 동향) 중국 소비자 물가는 '07년 하반기 이후 급등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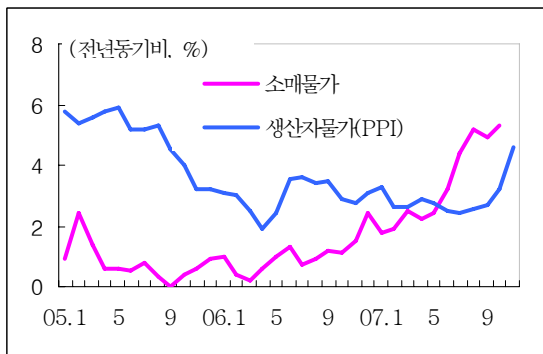
- '07.11월 소비자 물가는 10년만에 최고치인 6.9%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목표치(3%) 상회
- 돼지고기, 채소류 등 식료품 가격급등에 주로 기인하나, 과일 유동성, 임금상승 등 인플레이 압력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중국 CPI 상승률(전년동기비, %) : ('07.1/4)2.7 (2/4)3.6 (3/4)6.1 (10)6.5 (11)6.9

중국 소비자 물가 추이



중국 소매 및 생산자 물가 추이



### ② (향후 전망) '08년 중국 물가는 물가안정대책 등으로 '07년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높은 수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中 소비자물가 전망('07년→'08년, %) : (NDRC)4.7→4.5, (中 사회과학원)4.5→4.0

- 축산농가 지원확대 등 식료품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 식료품 수급상황 개선에는 어려움이 예상

\* 대표적인 가격인상 품목인 돼지고기(11월 상승률 56%)의 경우, 중국내 생산량이 전세계의 53%로 수입대체가 어렵고 사육에도 장기간 소요

- 무역 흑자, 외국인 투자 급증 등으로 과잉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원자재가격 급등 등 비용측 인플레이압력도 확대되는 모습

\* '07년 7~10월중 총통화량(M2) 증가율은 평균 18.1%로 목표치(16%) 상회

③ (추가 긴축 불가피) 향후 중국은 인플레이 압력 완화 등을 위해 추가적인 긴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07.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08년 통화정책 기조를 10년만에 '온건한 긴축(신중)'에서 '긴축'으로 전환

-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확대되고 인플레이 압력이 가중되어 경기과열 우려가 커진 데 주로 기인

\* '07년 들어 기준율 인상 10회(5.5%p), 금리인상 6회(대출금리 1.44%p, 예금금리 1.62%p) 실시

\* '07년 주가상승률(상하이 A 지수) : 123.1%, 07.1~9월 부동산가격 : 6.9%

○ 긴축방법은 기존의 기준율, 금리인상 등 금융조치뿐만 아니라, 은행대출 억제, 투자·수출 억제책 등 미시적 행정조치도 강화될 전망

- 위안화 절상도 수출여건 악화를 우려하여 대폭적인 절상은 어려우나, 금년(5.8% 절상)보다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우세

④ (고성장 지속 전망) 이러한 긴축조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08년 중국경제 전망 : (IMF)10.0% (OECD)10.7% (中 국가발전개혁위)10.8%

○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둔화를 초래할 정도의 긴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

○ 중국내 풍부한 노동력, 높은 생산성, 중서부 내륙지방 투자 확대 등이 고성장을 뒷받침하고, 사회보장 확대정책 등에 따라 가처분 소득과 소비도 증가세 확대 예상

⑤ (대응방향) 향후 중국의 성장과 물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

○ 특히, 중국 인플레이션에 따라 수입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우리 물가에 미칠 영향, 지속적 긴축의 누적효과 등에 따른 중국경제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

## 2. 국내 경제여건

### ① 우리경제는 최근 견실한 경기상승세를 지속

- 견실한 소비·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

\* GDP(국민계정,%) : ('06.4/4)4.0 → ('07.1/4)4.0 → (2/4)5.0 → (3/4)5.2

-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개선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 지속

\* 가계소득 추이(전국가구, %) : ('07.1/4) 6.2 → (2/4) 3.5 → (3/4) 7.4

- 설비투자는 상반기 큰 폭 증가 등에 따른 조정과정중이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다소 부진

-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견조한 해외수요, 우리 수출 지역 다변화 등에 힘입어 두자리수 증가의 호조세 지속

- 다만,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농산물 작황 부진 등에 따라 최근 소비자 물가가 3%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시현

\* 소비자 물가(%) : ('07.1/4)2.1 (2/4)2.4 (3/4)2.3 (10)3.0 (11)3.5 (12)3.6

### ② 금융시장은 마찰적 요인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 되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 상존

- 미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국내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소지

- 금융·외환시장의 쏠림현상(Herd Behavior)과 맞물려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 우려

### 3. 2008년 경제전망

① (성장) 2007년과 비슷한 연간 4.8%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며 상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은 上高下低의 흐름 예상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 지속, 고용의 질적 개선 등으로 2007년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면서 4%대 중반 증가 전망
- 설비투자는 높은 제조업 가동률, 기계수주 등 선행지표 추이,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7% 내외의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부진 등 하방위험이 있으나 건설수주 동향, 대형 국책사업 등을 감안할 때 2007년보다 다소 나아진 3%대 중반 증가 예상
- 수출은 2008년에도 두자리수의 호조세를 지속될 것이나,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2007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증가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떨어질 전망

② (고용)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 전망

-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보다 고용창출력이 큰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2008년 고용 여건은 2007년보다 나쁘지 않을 전망
- 사업서비스 분야 및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 지속 등 고용의 질적 개선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③ (소비자 물가) 3% 내외로 2007년보다 상승세 확대 예상

- 고유가, 중국發 인플레이션 등 비용측 물가상승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가시화

④ (경상수지) 균형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

-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2007년보다 다소 작아지겠으나, 해외투자 활성화에 따른 이자, 배당 수입 확대 등으로 소득수지는 개선 가능성

⑤ (종합 평가) 2008년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요인이 있기는 하나, 2007년에 이어 잠재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이룰 수 있을 전망

	'07년 실적	'08년 전망
▪ 경제 성장률	4.8% 내외	4.8% 내외
▪ 취업자 증가	28만명 수준	30만명 내외
▪ 소비자 물가	2.5%	3.0% 내외
▪ 경상 수지	55억불 내외	균형수준

<참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합의 전망(Consensus forecast)  
: 평균(Mean) 전망치 4.9%, 중위(Median) 전망치 4.95%

- 국내외 주요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2008년 성장률을 4%대 후반 또는 5% 내외로 예상

IMF (07.10)	OECD (07.12)	World Bank (07.10)	ADB (07.9)	한국은행 (07.12)
4.6	5.2	5.1	5.0	4.7
KDI (07.10)	예산정책처 (07.10)	금융研 (07.12)	삼성研 (07.11)	LG研 (07.12)
5.0	4.8	4.8	5.0	4.9

<註> 합의 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의 성장 전망치 중에서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들의 단순 평균치와 중위치를 사용

### Ⅲ. 2008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① 2008년은 대내외 위험요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경제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
  - 고유가 등 대외위험 요인의 선제적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기조 정착에 노력
  -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
- ② 이러한 목표 하에 5대 분야에 걸친 세부과제들을 추진
  - (안정적 성장기조 정착) 대외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물가 안정속에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규제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 내실화 등을 통해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 걸맞는 선진 기업환경을 구축
  - (경제 시스템 선진화) 우수 인적자본의 축적 및 활용도 제고, R&D 투자시스템의 효율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확대) 교육, 고용, 주거, 금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서민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제도를 내실화
  -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한미 FTA 조기비준, 양질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대외개방 및 협력 강화

**참고**

**2008년 경제운용방향 설문조사 결과**

◇ 2008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재경부-KDI 공동으로 전문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 : 교수·기업인 등 265명, 일반국민 : 재경부 PCRМ 고객 790명

① 2007년 평가 :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잘한 정책으로 한미 FTA 협상 타결, 미흡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택

<잘한정책>	부동산시장 안정	복지확충	한미 FTA 협상 타결	물가안정
전문가	17.0	8.3	69.8	1.5
일반국민	25.3	7.8	52.9	3.2

<미흡한정책>	경기활성화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안정
전문가	26.9	19.3	27.3	17.8
일반국민	29.4	10.1	30.1	14.3

② 2008년 전망 : 금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

\* 전문가 : 나아질 것 47.2%, 비슷한 수준 30.2%, 나빠질 것 22.6%  
 일반국민 : 나아질 것 41.5%, 비슷한 수준 34.3%, 나빠질 것 23.5%

- '08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은 4% 후반 ~ 5% 초반으로 예상  
 (전문가 50.2%, 일반국민 40.8%)

③ 경제운용 최우선 목표 :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2008년 경제운용 최우선 목표로 경제활성화 응답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성장잠재력 확충
전문가	38.5	13.2	8.3	37.4
일반국민	39.2	15.1	14.7	22.3

④ 투자활성화 방안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전문가 71.3%, 일반국민 57.3%)했으며

-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가 중요함을 지적(복수응답)

	정책의 일관성	규제철폐	금융·세제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전문가	41.5	82.6	19.6	35.1
일반국민	39.7	72.5	21.0	27.2

## IV. 주요정책 과제

### 1. 안정적인 성장기조 정착

- ◇ 전반적인 유동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경기회복에 따라 인플레이 갭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물가 안정속에 경기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미시적 대책을 추진
  - 경기흐름에 따라 상·하반기 균형있게 재정을 집행하되 대외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해외투자 활성화 등 외환수급 조절을 통해 환율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금리는 한은이 물가, 경기 및 금융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
  - 고유가 등 물가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 ◇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지속
  -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수요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 하되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대응
- ◇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 위험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전이시 유동성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은행의 자산 확대 경쟁을 완화
  -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되, 환투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 (1-1) 물가안정속에 경기 상승세 지속

### (1) 거시정책 운용

① (재정정책) 균형있게 재정을 운용하되, 경기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 금년 上高下低의 경기흐름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중 52%(주요사업비 기준) 집행\*을 목표로 추진

\* 상반기 집행목표치를 더 낮출 경우 연말 이월·불용 과다 발생 우려('07년 56%에 비해 4%p 낮은 수준)

- 공기업의 자체투자(40.2조원, '07년대비 13.2% 증가)도 경기흐름을 감안하여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탄력적 관리

○ 경제의 하방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 가변적인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

○ 잉여재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하고 국채금리 등의 중장기적 안정세에 기여

② (통화정책) 한국은행에서 물가,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

③ (외환정책) 해외투자 활성화 등 외환수급 조절을 통해 환율이 거시경제 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 지속

○ 필요시 스무딩 오퍼레이션 등을 통한 시장심리 안정 등 단기 안정화 조치도 병행

## (2) 물가안정 노력 강화

- ① (선제적 대응)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반(반장 : 재경부 차관)」을 구성·운영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 원유·곡물 등 비용측 상승요인은 시장원리에 의한 수급조절을 추진하되, 수입·유통과정의 효율성 제고
    - 다만 일시적인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
  - 수요측 상승요인은 거시정책을 통해 적절히 관리하되, 명절 등 시기별 물가불안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
    - ※ 매월 「물가안정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물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
- ② (공공요금)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원가 상승요인을 공기업의 비용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
  - 중앙·지방간 협조를 강화하여 공공요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유도
- ③ (농축수산물) 계약재배·정부 비축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 도모
  - 기상여건의 악화로 인해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최소화
- ④ (유류가격) 시장원리에 의한 수급조절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
  - 주유소 가격의 실시간 공개를 본격 시행('08.4)하는 등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1-2]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지속

- ① (주택수요 관리)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상황에 맞게 기존의 수요관리 장치를 운용
  - 주택수급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수요관리를 병행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
  - 초과공급 상황인 지방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관리장치를 점진적으로 완화
- ②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연30만호 이상, 전국 연50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
  -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하여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광역재정비사업 등 도심내 주택건설 활성화 도모
  -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사업추진상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08.상반)
- ③ (서민주거 안정)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맞춤형 주거 안정지원 강화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10만호)과 민간 재원을 활용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추진
  -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 임대를 지속 지원('08년 13,300호)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영세민 등에게 저리(2~4.5%)의 전세자금 3.1조원 융자지원

### [1-3] 금융·외환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관리

- ①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위험전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 시장위험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전이시 유동성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은행의 자산 확대 경쟁을 완화
    - 자산을 급격히 증대시킨 은행에 대해서는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한 후순위채 발행을 억제
  - 은행의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 유도
    - \* 은행채등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ABS 및 MBS 발행확대 등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유도
- ② (외환시장) 큰 틀에서의 글로벌 환율 흐름을 존중하면서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되, 환투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 이와함께 글로벌 유동성 관리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적 공조노력 지속
- ③ (대외채무관리) 한은 스왑 참여, 외은지점 손비인정 범위 축소('08.1월, 6배→3배)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은·금감원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 대책 마련

##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 기업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 기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관련 법제 개선 등 추가적인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
- 과거의 단편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기능적 규제개혁을 추진
  - 규제 내용뿐 아니라 그 취지까지 명료하게 담은 규정집 (**thick rule book**)을 발간하여 누구에게나 동일한 룰이 적용되도록 투명화(Rule-based)
  - 이와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원칙과 합목적성에 의한 규제운영 체제를 강구(Principle-based)

### ◇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 기 마련된 「1~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T 활용도 제고 등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 ◇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를 내실화

- 창업, 가업승계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요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

###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 농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품질 고급화 추진
- 농지전용 허가 권한 확대, 농지 소유제한 완화 등 농지제도를 경쟁력 있게 개편

## [2-1] 기업경영 환경의 지속적 개선

- ① (기업환경개선) 기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
  -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관련 법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② (규제개혁) 과거의 단편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기능적 규제개혁을 추진
  - 규제 내용뿐 아니라 그 취지까지 명료하게 담은 규정집 (**thick rule book**)을 발간하여 누구에게나 동일한 룰이 적용 되도록 투명화
  - 이와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원칙과 합목적성에 의한 규제운영 체제를 강구
    - 규제집행 공무원의 각종 성과평가지 규제개혁 과제 발굴 성과를 반영함으로써 일선현장에서의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 규제 신설시 비용·효과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10년단위 일몰제 운용과 규제총량제 의무화 추진

## [2-2]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①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기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강구
  - 문화·방송 등 지식서비스업의 규제와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IT를 활용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과제를 적극 추진
- ② (관광·레포츠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관광·레포츠 산업을 적극 육성
  - 여행패턴 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수지 적자에 대응한 관광산업 경쟁력방안 마련('08.하반)

## [2-3] 중소기업 지원의 내실화

- ①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창업, 가업승계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요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신기술 창업 활성화
  -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액을 대폭 확대하고 가업에 대한 주식의 사전상속 특례 도입
    - \* 가업상속 공제액 : 현행1억원 →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 ×20%(30억한도) 중 큰 금액
    - \* 사전상속 특례 : 5억 공제후 10% 저율과세, 상속시 정산(30억 한도)
- ② (벤처기업 정책의 재정비) 시장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
  - M&A 활성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유한책임회사형(LLC) 창투자 도입을 통하여 펀드조성을 활성화('08. 하반기)
    - \* 개별 펀드매니저들이 일정 규모(300억원 이상)의 창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당해 조합을 운용할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 등)을 창투사로 인정

## [2-4]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 ①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품질고급화 추진
  -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농산물(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확대
- ② (농지제도) 농지전용 허가권한 확대, 소유제한 완화 등 농지제도를 경쟁력 있게 개편
  - 계획관리지역내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한 확대(20→50ha) 및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제한 완화(3천→1만㎡) 추진
  -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조건부 상속농지의 소유범위 확대 등 헌법상 耕者有田원칙 범위내에서 소유규제 완화 방안 검토

### 3.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 ◇ 우수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도 제고 추진
  - 우수한 전문 외국인력의 유입과 국내 잔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여성·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산업계관점의 대학평가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기반 마련
- ◇ R&D 투자시스템을 효율화
  - 글로벌 R&D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고 R&D 투자의 전략성과 성과중심의 평가를 강화
- ◇ 부품소재, 기계산업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독일 등 선진국 기계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
- ◇ 에너지 공급체계를 선진화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 ◇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산업 선진화 노력 지속
  - '09.2월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 국내 보험사가 **Global Player**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금융업종별 발전전략 마련
  - 금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단계 「특화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

### ③-1) 우수 인적자본의 축적 및 활용도 제고

#### ① (인력양성)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기반 마련

- 대학의 적극적인 수익창출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지주회사 제도 도입('08.2) 및 활성화
-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 교육과정과 교육인력을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발전하도록 유도
  - 경제5단체와 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일부 산업분야(08년 금융, 건설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08.하반)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중심으로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 실시('08년중 반도체, 철강)
- ※ '09년이후 산업계관점의 대학평가제도 발전방안도 함께 협의

#### ② (해외전문인력 유치) 해외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체계화한 범정부적인 유치 전략 마련('08.상반)

- '외국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전문인력에 대한 출입국·영주권 제도 개선 등 추진

#### ③ (여성·고령자) 여성 및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보육료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08.6) 등을 통해 육아부담 경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 \*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 ('07) 5,936억원 → ('08) 8,079억원
  - 유아기본보조금을 농산어촌지역에 우선 도입(150억원)하고, 기존 3개지역에서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16개지역으로 확대
  - \*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확대 : ('07) 27억원 → ('08) 100억원
- 정년연장장려금 실시('08.1) 등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3-2) R&D 투자 시스템의 효율화

- ① (글로벌협력 강화) 선진국과의 R&D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우수 기술 도입 촉진 및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해외 우수연구기관의 전략적 유치를 통한 우수연구인력과의 공동연구 경험 및 네트워크 확산 기반 마련
    - 경제자유구역 등을 활용한 해외 연구기관 입주 요건 정비
  - R&D 아웃소싱 컨설팅 및 국내 기업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 업체간 연계 지원을 담당하는 **One-stop**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T/F 구성
  - 노벨상 수상자, 해외석학 등 우수연구주체와의 국제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 ② (투자 전략성 제고) 미래 전망 및 민간의 R&D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전략적 R&D 투자 확대
  - 기후변화대응, 첨단 에너지·환경, 융합 IT, 우주·원자력 등 미래 신산업 및 거대·공공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정보전자, 기계제조공정 등 민간 역량이 성숙된 분야는 제품 개발연구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기초·원천연구로 전환
  -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업 R&D 확대
    - \* 기업R&D투자 중 서비스부문 비중 : 한국 7.0%(’05), 미국 36.5%(’03), 영국 36.1%(’03)
- ③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국가 R&D사업 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와 예산간 연계를 강화
  - 평가매뉴얼 배포,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연구성과 활용 확산

### 〔3-3〕 부품소재·기계산업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 ①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 육성 추진

- 에너지·우주·환경 등 주요분야에 대한 「국가 소재 R&D 종합계획」을 수립('08.상반)하고, 소재 R&D 지원 확대
  - \* 산업·에너지 R&D 예산중 소재분야 지원 비중을 16%(‘06) → 30%(‘15)으로 확대
- 소재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장기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을 지원
  - \* (‘07) 10개 과제, 200억원 지원 → (‘08) 20개 과제, 400억원 지원
-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12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부품소재 전문기업 펀드 조성 추진

#### ② (선진국 기계산업의 국내유치)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 등 선진국 기계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

- 「프로젝트 합동관리팀\*」 구성, 獨·日 등의 선진 기계업체 유치
  - \* 프로젝트 합동관리팀 : 중앙정부, 지자체, IK, 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해외기업 유치를 공동 추진
- 유력 해외투자가 대상의 투자유치 컨퍼런스 개최('08.11)

### 〔3-4〕 에너지 공급체계 개편 및 기후변화에의 대응

#### ① (에너지수급체계) 저탄소형 환경친화적으로 개편

- 바이오디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②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탄소펀드의 조성도 활성화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08년) 수립

### ③-5)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선진화

- ① (자본시장) '09.2월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 규제만을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
    - \* (예시) 적격투자자 헤지펀드 허용(1단계, '09년말) → 사모헤지펀드·공모형 재간접헤지펀드 허용(2단계) → PEF와 헤지펀드 통합(3단계)
- ② (보험·은행) 국내 보험사가 **Global Player**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금융업종별 발전전략 추진
  - 미국, 영국, EU 등 금융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보험업법체계를 선진화(상반기중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
    - \* 대형화·종합화 유도, 업무영역 확대·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상품개발의 창의성·자율성 확보, 보험소비자보호 강화, 판매채널 경쟁력·책임성 강화
  - 은행의 건전경영과 대출에 편중된 획일적인 수익모델의 다변화를 위하여 은행제도를 개선('08.상반)
- ③ (금융허브) 금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단계 「특화 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
  - \* 1단계 : 금융허브 기반구축(~'07년), 2단계 : 특화금융허브 완성(~'10년), 3단계 : 아시아 3대 금융허브 구현(~'15년)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08.3월 시행예정)에 따라 '금융중심지 기본계획'(3개년)을 수립·추진
  - 금융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4.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 일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 없는 도입 등 추진
- ◇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연계 학자금대출 제도(ICL) 도입 추진
- ◇ 서민·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
  - 기 마련된 유류비 경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절기(1~2월) 가스요금 부담 완화
  - 주택용·일반용 전력요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통신요금 인하 유도
- ◇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의 서민피해 최소화
- ◇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복지제도를 합리화
  -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

#### **[4-1] 일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근로장려세제)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없는 도입 추진('08.1 시행)

- \* 총소득 1,700만원(최저생계비의 1.2배)미만,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두 자녀 이상 부양,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80만원 지급
- \* 08년 적용대상 31만가구, 연간 약 1,500억원 소요 추정

② (사회서비스 확충 등)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08.상반)

- \* 재정에 의한 사회서비스일자리 : ('07) 20.1만명 → ('08) 22.8만명

#### **[4-2] 저소득층 교육 기회 확대**

①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저소득층에 대한 무이자·저금리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

- \* 08년 계획 : 무이자 대출(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 ('07년) 60천명 → ('08년) 70천명  
저금리 대출(3분위 이하) : ('07년) 110천명 → ('08년) 313천명

② (소득연계학자금 대출제도) 미래소득에 학자금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연계시키는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도 도입 검토

- 미래에 높은 소득이 예상되는 학과(예: MBA, 금융전문대학원 등)에 대해 우선 시범운영하는 방안 검토

- \* 주택금융공사에서 유동화 등을 통해 대출재원 마련을 검토

-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에 보완적으로 소득연계학자금 대출을 병행하여 실시

### **[4-3] 서민·중산층의 생활비 부담 경감**

- ① (유류비) 고유가 종합대책('07.11월)에 포함된 서민·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경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 기초수급자 가계에 대해 난방비를 추가(동절기 12~2월, 가구당 총 7만원) 지원하고, 등유 등 난방용 유류의 탄력세율 인하(30%) 등
- ② (전력요금) 전력요금체계 조정('10년까지 교차보조 해소)을 통해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 ③ (가스요금)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통해 동절기(1~2월) 서민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08.1월부터 2.6% 인하)
- ④ (통신비) 규제완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발적인 통신요금 인하 유도
  - 통신시장내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소매요금 규제 완화

### **[4-4]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① (금융소외계층 지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 지원 추진('08.1/4)
  - \* ('07.12월~'08.1월) 30만원 이하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 진행 → ('08.1월~2월) 출연 금액·시기 등 협의 → ('08.2월말)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 ('08.3월) 재단 출범
- ② (대부업)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의 서민피해 최소화

< 대부업 개정안 주요내용('07.11월 국회제출)>

-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공정위 외에 시·도에서도 직접 규제)
- 대부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 상호규제(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 사용) 등

## [4-5]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및 복지제도 합리화

### ① (기초노령연금 등) 금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차질없이 도입('08.1)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 빈곤 완화

\* '08년 노인인구의 60%(약 300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84천원,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원활히 시행('08.7)하여 치매·중풍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 현행 통합급여 체계를 주거·의료·자활 등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병행

### ③ (연금 등) 국민연금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특수직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 추진

- 급여율 하향조정, 인구·경제변수의 변동 등에 따른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국민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08.10)

- 기초노령연금·퇴직연금과의 보완적 발전방안 마련 등 내실화를 추진하고, 확정기여형(DC형) 연금제도 도입 등 구조적 개혁방안 검토

-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혁법안 추진('07.12, 법개정안 국회 제출)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에 상응하는 개혁안을 마련·추진하고, 건강보험은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

## 5.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협력 강화

### ◇ 한·미 FTA 조기 비준 동의 및 FTA 체결 확대

-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가급적 참여 정부내 비준동의안 처리를 마무리
- 협상이 진행중인 FTA는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략적으로 실익이 있는 새로운 FTA도 병행추진

### ◇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

- 질적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 투자 유치노력 강화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남북 경협을 구체화하고 내실있게 추진

- 남북 정상회담·총리회담 및 경제협력공동위 합의에 따른 경협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
- 남북 공동번영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경협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협약

### ◇ 대외원조 및 대외경제협력을 활성화

- ODA 등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경협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 **(5-1) 한미 FTA 조기 비준동의 및 FTA 체결 확대**

① (한미 FTA 조기 비준동의)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

- 한미 FTA 피해 보전대책 관련 입법도 비준 동의안과 연계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한미 FTA 조기 발효가 필요한 이유>

- GDP 증가, 무역수지 개선, 소비자 후생증대 등 한미FTA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를 조기에 실현
- 협정 발효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한 기회비용 발생 및 미국의 경쟁국들과의 FTA 추진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

② (FTA 체결 확대) 협상이 진행 중인 FTA를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략적으로 실익이 있는 새로운 FTA도 병행

## **(5-2)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① (외국인투자) 질적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경주

- 서비스업 및 R&D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 추진
-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선택적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보완

\* 현금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조세감면 대상 첨단업종의 범위 조정

②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신규지정 3개 구역을 빠른시일내에 출범('08.상반 발족)시키고,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적 성격 강화를 통한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 외자유치 관련 제도·기관간 연계성 강화 추진

### **[5-3] 남북 경협외 심화·발전**

- ① (정상회담 등 후속조치 이행) 남북 정상회담·총리회담 및 경제협력공동위 합의에 따른 경협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
  - 2단계 개성공단 건설에 착수하고 통행·통신·통관 개선 방안을 확정·시행하여 사업 활성화
  - 안변 선박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에 착수하는 한편, 남북 공동이용 확대방안 구체화
- ② (경협외 발굴) 남북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경협외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경제 활성화 추진
  - 상생형 사업(자원개발 등)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국제금융기구의 對북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5-4] 대외 경제·금융협력의 활성화**

- ① (대 개도국경협)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경협외 효과성 제고
  - ODA 확대계획에 맞추어 EDCF 승인규모를 확충하고 한국형 경제개발모델 구축 등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 제고
- ② (금융협력)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금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
  - IMF지분 증대, 세계은행 신탁기금 등을 통해 우리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경협외 레버리지로 활용
  - \* 세계은행 신탁기금과 공동으로 우리의 Mobile Banking 시스템 수출이 용이한 몽골 등 개도국과의 시범 사업 추진하고, 우리기업 및 금융기관이 세계은행 산하 IFC, MIFA와 정기적으로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Information session 마련

## V. 참여정부 마무리 과제

◇ 참여정부 임기내에 마무리해야할 주요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입법을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 (1) 법안 처리과제 : 임시국회(08.2)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 ① 한·미 FTA 국회 조기 비준동의 추진('07.9.7 국회제출)

-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참여정부 임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활동 지원 강화

#### ② 사회보험통합징수법 제정('06.11.16 국회제출)

- 4대 사회보험의 중복업무인 적용 및 부과·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③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임시국회 제출예정)

- 거래소 상장에 따른 공익성과 영리성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④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방지 대책관련 법 개정

-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사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임시국회 제출예정)

-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지배지분 매각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을 개정
- 다만,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3월말까지 지분매각 기본계획 및 전년도 매각실적을 국회에 보고토록 함

⑥ 임대주택법 개정('07.2.6 의원입법)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펀드 설립 및 정부 재정지원 근거 등 마련

⑦ 국민연금법 개정('07.12.21 국회제출)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체계를 개편

⑧ 의료법 개정('07.5.16 국회제출)

-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산업 경쟁력을 제고

⑨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개정(임시국회 제출예정)

- 경관·미관을 고려한 '질높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절차상의 보완 방안 마련

⑩ 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 제정('07.4.27 국회제출)

- 서남권 등 낙후지역의 체계적·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의 법적 근거 마련

⑪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07.1.19 국회제출)

- 행정·공공기관 이전 부지, 노후 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수도권 규제 특례 적용)

⑫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임시국회 제출예정)

-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재판매사업을 허용하고, 통신소매요금을 신고제로 전환

## **(2) 정책 추진과제 : 금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등이 차기 정부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

### **① 고유가 대책('07.11)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 등을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차질없이 추진

\* 기초수급자 가계 난방비 추가지원(7만원) 사업의 경우 '07.12월 2.2만원 (총 140억원) 기 지급하였으며, '08.1~2월중 잔여금액 4.8만원 지급 계획

### **②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

- 기초노령연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

\* '08년부터 전체 노인의 약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84천원)를 매월 지급

### **③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없는 시행**

-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을 위해 소득과약을 제고와 홍보를 지속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

\*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에 첫 근로장려금 지급

- 신청서류 간소화, 소득증명자료 허용범위 확대 등 신청 편의를 위한 노력도 지속

### **④ 보험업법 개편 추진**

- 보험업법 체계를 미국, 영국, EU 등 금융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선진화

5 「2007 남북정상선언」 등의 내실 있는 이행

- 총리회담 및 경제협력공동위에서 합의한 일정에 따라 참여정부 임기내에 각종 분과위·현지조사 및 사업 초기 조치 등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확보
  - \* 개성공단 통행절차 개선, 개성공단 통신센터(1만회선 능력) 착공, 종자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착수 등

6 기후변화협약 대책 마련·시행

- '07.12월에 수립된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5개년 계획)을 '08년도부터 본격 시행

7 2012 여수세계박람회 후속조치 추진

- 박람회 준비조직의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 각종 사업추진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특별법 제정 등 추진